

주간 통일정세

2016-13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납북자
5. 대북지원
6.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3.28	北 김정은, 1주일째 군사행보 자제... "핵정상회의 관망" 해석도(연합뉴스)
		北 김여정, 과학분야 대학교수와 결혼한 듯(연합뉴스)
		北 7차 당대회 공식절차 개시... 참가 대표자 선발 중(연합뉴스)
	3.29	최룡해, 딸 부패로 김정은이 질책하자 혁명화 자칭(연합뉴스)
		北 주도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에 리용선(연합뉴스)
	3.30	北, 고난의 행군 이어 군자리정신까지... 대북제재 효과(연합뉴스)
		北 '정치학습 권위자' 박병식 교수 사망... 김정은 조화 보내(연합뉴스)
		韓 독자제재 오른 北 장창하, 무기개발 현장 어김없이 등장(연합뉴스)
		北 최대 발전소 설비교체사업 보위부 손에... 김원홍의 힘? (연합뉴스)
	3.31	다시 '병진노선' 외치는 北... 체제결속 고립돌파 의도(연합뉴스)
北 김영철 통전부장, 정찰총국장 겸임하는 듯(연합뉴스)		
경제	4.1	'한미 제재' 김석철 前미인마 北대사 귀국... 신임대사 부임(연합뉴스)
		北, 7차 당대회 앞두고 대형토목공사 박차(연합뉴스)
	3.28	대북제재 '약발' 나타나... 北 '제2 고난의 행군' 거론(연합뉴스)
		유엔제재 北 조선광업사 간부, 대북결의 직후 이란 방문(연합뉴스)
	3.29	北, 고난의 행군 이어 군자리정신까지... 대북제재 효과(연합뉴스)
		유엔 대북 제재로 北 수출 절반↓... 경제 직격탄 예고(연합뉴스)
	3.30	한국 기업들, 중소기업 통한 北과 우회거래 속속 중단(자유아시아방송)
		북한 김책제철소, 원료·전력난에 가동중단(자유아시아방송)
	3.31	北무역회사, 대북송금 막히자 베이징-평양 열차로 외화운반(데일리 NK)
		北, 올해 국가예산지출 5.6% 증액... 국방비 15.8% 차지(연합뉴스)
北 예산안 들여다보니... 전문가들 "숨겨진 국방비 많다"(연합뉴스)		
北경비대, 야간에 압록강 건너 중서 구걸·횡포(자유아시아방송)		
	유엔제재로 北 보위부원도 식량난... 탈북자에 SOS(자유아시아방송)	

		대북제재 강화 후 밀수업자 더 활개...화학·철강 수요 늘어(연합뉴스)
	4.1	北, 탈북자 송금 증가인 단속으로 외화유입 감소(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주민들, 5월 당대회서 개혁개방 노선 기대(자유아시아방송) 유엔 제재로 北 수출 반토막 날 것...외환보유고도 고갈(연합뉴스)
	4.2	북한접경 中상인들 "한반도위기 결국 사라질 것"...투자준비(연합뉴스)
사회 문화	3.28	北 피의자 구속기간 무려 5개월25일...검사 권한 막강(연합뉴스) 북한 '산림자원 관리 정보체계' 개발 주장(연합뉴스)
	3.29	北, 남측과 통화하는 주민 잡기 위한 매복작전 강화(연합뉴스) 북한TV, 연일 '전쟁영화'로 대남·대미 적개심 고취(연합뉴스)
	4.1	북한, 페이스북 트위터·한국사이트 공식 차단(연합뉴스)
	3.27	미국 국무부, 북한에게 '도발적 언행 삼가라' 거듭 촉구(연합뉴스) 중국, 북중 접경지역 밀무역 대대적 단속 나서(자유아시아방송)
외교 국방	3.28	리수용 북 외무상, 미국에 선제 핵공격 가할 준비태(연합뉴스) 중국서 새 100위안권 위폐 발견...中언론 "북한산 위폐 대량유통"(연합뉴스)
	3.29	中, 北외무상 '선제 핵공격' 주장에 "자극적 언행 말아야"(연합뉴스) 조선총련 산하 가극단 내달 북한서 김일성 생일 기념 공연(연합뉴스) 北, 원산서 북중 접경 부근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 발사(연합뉴스)
	3.30	미국 상장기업 25개사 북한산 금 거래 연루(연합뉴스) 北, 핵안보정상회의 맹비난...“美부터 핵폐기 선언해야”(연합뉴스) 美 전문가, “북한 신행 교체추진 2단 미사일 개발 가능성”(연합뉴스) 갈루치, “북한 핵확산 시도, 미국에 특히 위협”(연합뉴스)
	3.31	北외무성, 미국이 자주권 침해하면 핵무력으로 징벌 위협(연합뉴스) 美재무, 국제사회 공조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北변화 유도(연합뉴스) 北, DMZ에 경계초소 200여개 추가...공세적 작전하나(연합뉴스) 北 내륙으로 쏜 방사포, 표적 빚나갔을 가능성(자유아시아방송)
	4.1	北관영매체에 中 우회 비난글...“친선관계 서슴없이 저버려”(연합뉴스) 日외무상, “北도발 받아들일 수 없다” 미사일 발사 비판(연합뉴스) 北, 동해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1발 발사...핵안보정상회의 겨냥(연합뉴스) 北 GPS 교란전파 과거보다 반경 확장...교란장비 10여종 보유(연합뉴스) 北, 한국 겨냥 핵탄두 소형화 기간 단축 가능(연합뉴스) 北핵무기 김정은이 직접 통제...안정성 낙관은 일러(연합뉴스)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사 준전시상태...핵 계속 추진(연합뉴스)
	4.2	北 “유엔, 한미훈련 관련 긴급회의 요구 외면” 주장(연합뉴스)

北, 신형 지대공유도무기 시험발사...공중목표 정확타격(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김정은, 1주일째 군사행보 자제...“핵정상회의 관망” 해석도 (04.01 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 방사포 발사 시험, 장거리포병대 타격연습 등 공개적인 군사행보에 치중했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잇따라 군 관련 행사 대신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지난달 28일 (이하 보도시점) 평양시 보통강변의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찾은 김 제1위원장은 나흘 만에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신흥기계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흥기계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언급하면서 "전례 없는 로력적(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 같은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홍영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창광 당 부부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정승일,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김여정, 과학 분야 대학교수와 결혼한 듯 (03.2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평범한 집안 출신의 과학 분야의 대학교수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8일 "김여정은 과학 분야의 대학교수와 결혼한 것으로 안다"며 "김여정의 남편은 빨치산 집안의 자제가 아니라 북한의 평범한 집안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김여정이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함.

■ 최룡해, 딸 부패로 김정은이 질책하자 혁명화 자청 (03.29 연합뉴스)

-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난해 한때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이유가 부패를 저지른 딸과 함께 혁명화 교육을 자청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옴.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2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프로그램 '북조선 인민통신'에 출연해 "최룡해 큰 딸은 아버지의 배경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정 부패를 일삼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고 한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주장.
- 그는 또 최룡해가 혁명화 3개월 만에 복귀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국제사회 압력이 커지고 측근들로부터 바른 소리를 못 듣는 김정은으로서는 최룡해 같은 조언자가 아쉬웠을 것"이라고 해석함.

■ 北 주도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에 리용선 (03.29 연합뉴스)

- 국제무도경기위원회(IMGC)는 제8차 총회를 열고 국제태권도연맹 리용선 총재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리 위원장은 2000~2003년 국제무도경기위원회 부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국제태권도연맹 총재도 맡고 있으며, 장웅 전 위원장은 명예위원장에 올랐음.

■ 北 '정치학습 권위자' 박병식 교수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 (03.30 연합뉴스)

- 북한의 박병식 김일성정치대학 교수가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중앙통신은 박병식의 구체적인 사망 일자를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는 김일성상 계관인이며 로력영웅, 교수, 박사인 김일성정치대학 연구사 겸 지도교원 박병식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9일 고인의 령전(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밝힘.
- 김일성정치대학 강좌장을 역임한 박병식 교수는 1999년 9월 김일성 주석의 본처인 김정숙 50주기를 맞아 중앙연구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 내 정치사상 학습을 주도해 온 인물로 알려짐.

■ 韓 독자제재 오른 北장창하, 무기개발 현장 어김없이 등장 (03.30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장창하 북한 제2자연과학원 원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개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 30일 연합뉴스가 북한 매체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창하는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를 비롯해 최근 북한의 주요한 무기 개발 현장마다 거의 예외없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 **北 최대 발전소 설비교체사업 보위부 손에…김원홍의 힘? (03.30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업권을 놓고 권력기관 간에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던 북창화력발전소의 설비교체 업무를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발전소의 설비교체를 둘러싸고 권력 집단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면서 "김정은이 북창화력발전소의 설비교체와 보수공사를 국가보위부에 위임했다"고 말함. 그는 "형식적으로는 위임이라 하지만, 실제론 보위부장 김원홍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 **北 김영철 통전부장, 정찰총국장 겸임하는 듯 (03.31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해온 김양건의 후임으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된 김영철이 기존 직책인 정찰총국장도 겸임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31일 "작년 말 김양건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당 비서 겸 통전부장에 임명된 김영철이 여전히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다만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겸임하고 있더라도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정찰총국을 이끌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노동당 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근무하고, 정찰총국장은 인민무력부 청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 인물이 두 직책을 장기간 동시에 맡기 어려운 데다 당 비서와 정찰총국장은 위상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임.

- **‘한미 제재’ 김석철 前미얀마 北대사 귀국…신임대사 부임 (03.31 연합뉴스)**

 -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오른 뒤 교체된 김석철 전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이달 중순 북한으로 돌아가고 새 대사가 부임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은 31일 "김석철 전 대사가 지난 17일께 현지에서 떠나고 후임 대사가 지난주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김석철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특별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이달 초에는 우리 정부의 독자 금융제재를 받는 단체·개인 명단에 올랐음. 김석철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창광무역)의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파악함.
 -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호범 신임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다. 공식행사

■ 北 7차 당대회 공식절차 개시...참가 대표자 선발 중 (03.28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5월 7일부터 개최 예정인 7차 노동당 대회 준비를 위한 공식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9일 "북한은 이달 중순부터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에 보낼 시·군 단위 후보자를 선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며 "다음달 초에는 도(직할시) 단위 당조직에서 당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당 대회 참가자는 통상 시·군-도(직할시)-중앙의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시·군 단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도 단위에서 선출하고 중앙당에서 걸러내는 방식임.

라. 주요 기관 행위

■ 北, 7차 당대회 앞두고 대형토목공사 박차 (04..01 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주요 대형토목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백두산영웅청년 3호 발전소의 댐 공사가 지난달 31일 완료됐다고 1일 보도했다. 지난 1월 13일 댐 본체 등에 대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8일 만임. 공사를 맡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댐 공사 완료 당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사를 마쳤다는 보고를 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함.
- 또 조선중앙TV는 최근 "황해간석지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이 황해도 능금도 간석지 2호 제방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에는 10km²에 달하는 양식장이 들어설 예정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고난의 행군 이어 군자리정신까지...대북제재 효과 (03.29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5월 7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한국전쟁 때의 구호인 '군자리(君子里)정신'까지 거론하면서 주민들을 다그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사설을 통해 "우리는 1950년대의 군자리혁명정신으로 충정의 70일 전투를 전례 없는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감으로써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 내어야 한다"고 강조함.
- 사설은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자리정신을 체질화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함.

■ **다시 '병진노선' 외치는 北…체제결속 고립돌파 의도 (03.30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다시금 핵 개발과 경제건설을 함께 이루자는 '병진노선'을 내세우고 있음.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30일 논설에서 "새로운 병진노선(노선)은 반미전면대결전에서 최후승리의 진로를 명시하여준 불멸의 대강"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이 독창적인 노선은 핵무력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그것을 중추로 한 전쟁억제력으로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과 반미 전면 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할 수 있게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주장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올해 국가예산지출 5.6% 증액…국방비 15.8% 차지 (03.31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함.
- 북한은 올해 국가예산지출을 통한 투자를 공업 부문은 지난해 대비 4.8%, 농업 4.3%, 수산 6.9%, 기본건설 13.7%, 산림 7.5%씩 각각 늘림. 또 과학기술 분야는 5.2%, 교육 8.1%, 보건 3.8%, 체육 4.1%, 문화 7.4% 증액함.
-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고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워 건설의 대번영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함.

■ **北 예산안 들여다보니…전문가들 “숨겨진 국방비 많다” (03.31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예산 중 국방비 비중을 15.8%로 확정했지만, 실제 비중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함. 북한은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올해 국가 예산 지출안을 확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하지만 숨겨진 국방예산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김영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 팀장은 "북한이 말하는 국방비는 주로 인민무력부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국방 산업 및 공업에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함.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국방비가 북한의 다른 예산에 숨어있다"며 "공식 국방비 비중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전체 예산이 늘었다는 점에서 국방비 총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북한의 국방비는 올해 공식 예산에 잡힌 것만 15.8%일 뿐이며, 실제 국방비는 숨겨진 게 훨씬 많다"고 설명함.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대북제재 '악발' 나타나나...北 '제2 고난의 행군' 거론 (03.28 연합뉴스)

- 북한이 28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제2차 고난의 행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의 최강의 힘'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혁명의 길은 멀고 험하다"면서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파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3월3일)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는 과거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측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한 수준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됨.

■ 북한 김책제철소, 원료·전력난에 가동중단 (03.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주요 제철소인 함경북도 청진시의 김책제철소가 올해 들어 철강 원료 부족과 전력난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함경북도 한 소식통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제철소가 올해 1월 딱 한 번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가동을 멈췄다"며 "철강 생산이 중단되면서 함경북도 곳곳에 벌여놓은 국가대상건설에 들어갈 강재가 부족해 건설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함.
- 그러면서 "가동 중단은 낡은 기계 설비와 철강 원료 부족 때문"이라며 "거기에 제철소 가동에 필요한 전력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철강 생산이 완전히 멈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함.

■ **북무역회사, 대북송금 막히자 베이징-평양 열차로 외화운반 (03.30 데일리NK)**

- 북한 무역회사들이 유엔의 대북제재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북송금이 막히자 평양-베이징(北京) 국제열차를 이용해 외화운반에 나섰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함.
-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으로 달려나 위안화를 송금하는 은행시스템과 현금 유통까지 완전 차단됨에 따라 (북한 무역회사의) 대표들은 국제열차로 외화를 몰래 들여보내고 있다"면서 "국제열차가 세관보다는 비교적 검사와 통제가 심하지 않고 수화물 검사도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힘.
- 소식통은 "중국 세관이 검사와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해도 북한 무역회사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지 달러를 북한으로 들여보낼 것" 이라면서 "속임수와 비법을 쓰는 데 도가 튼 이들의 수법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이상의 될 것"이라고 말함.

■ **북경비대, 야간에 압록강 건너 중서 구걸·횡포 (03.31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북한 경비병들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중국 단둥(丹東)의 후산장청(虎山長城)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조선(북한) 국경경비병들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서 "하루 영업이 끝나고 밤이 깊어지면 북한 경비병들이 경비정을 타고 와 '먹을 것 줘 달라', '담배 내놔라', '맥주 줘 달라' 등 막무가내 요구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처럼 북한 경비병들의 횡포가 끊이지 않는데도 중국 변방수비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유엔제재로 北 보위부원도 식량난...탈북자에 SOS (03.31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 핵심계층(당·보위·보안·행정기관 간부)에 대한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이 최근 한국에 있는 탈북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함경북도 무산군 출신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김모(50, 여) 씨는 RFA에 "북한에서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보위부에 다니던 사람한테 여러 번 (국제) 전화가 올 정도"라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좀 도와달라'는 요청의

전화를 여러 차례 해왔다"고 전함.

-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우주개발은 주체조선의 불굴의 녀이며 억척 불변의 궤도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날뛰는 원수(원수)들의 고립 압살 책동은 갈수록 포악해지고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나라도 없다"며 국제제재로 심각한 고립상태에 빠졌음을 사실상 자인함.

■ 北, 탈북자 송금 중개인 단속으로 외화유입 감소 (04.0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공안기관이 탈북자 송금 중개인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외화 유입이 감소해 장마당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함.
- 한 대북 소식통은 RFA에 "국가안전보위부가 정보원을 가동해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 조사부터 시작해 외국과 연계해 '돈 작업' 하는 사람들, 즉 송금 중개인들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고 전함. 그러면서 "이런 단속은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 소식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면서 "보위부가 '과뿌리 들쭉들쭉 모조리 잡아내겠다'고 공언하고 국경연선(국경지역)에서 외부 정보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고 있다"고 덧붙임.
- 다른 소식통은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은 그동안 고스란히 장마당으로 들어가 시장 활성화의 종자돈 노릇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당국이 단속에 나선 것은 체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함.

■ 북한 주민들, 5월 당대회서 개혁개방 노선 기대 (04.0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주민들이 오는 5월에 열리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한적이지만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노선이 반드시 제시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1일 보도함.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김정은까지 3대에 이르도록 변할 줄 모르는 폐쇄정치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며 "주민에게 있어서 개혁개방은 희망이 아닌 필수로 (머리 속에) 굳어있다"고 전함.
- 이 지역의 다른 소식통은 "이번에 열리는 7차 당대회에서도 개혁개방 노선 없이 혁명적 구호만 반복한다면 김 제1위원장은 (권력안정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금 주민들은 개혁개방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여기며 7차 당대회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밝힘.

라. 대외 경제 관계

■ 유엔제재 北 조선광업사 간부, 대북결의 직후 이란 방문 (03.2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간부들이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 이란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8일 "KOMID 간부들이 지난 6일 중국 베이징 공항을 경유해 이란 테헤란을 방문한 뒤 11일 테헤란에서 출발해 다시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온 것으로 안다"고 밝힘.
- KOMID라는 영문 이름으로도 불리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돼 2009년부터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됨.
- 이 소식통은 "KOMID 간부들이 이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대금 정산 혹은 사업 논의를 위해 이란의 SHIG 측을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함.

■ 유엔 대북 제재로 北수출 절반↓...경제 직격탄 예고 (03.29 연합뉴스)

- 유엔(UN)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북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9%(이하 2014년 통계 기준)에 달한다고 밝힘.
-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은 33억4천400만 달러이며 이 품목들의 수출액은 15억 20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유엔의 제재가 본격화된 만큼 북한의 수출액도 절반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
-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얼마나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지가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지을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한국 기업들, 中기업 통한 北과 우회거래 속속 중단 (03.29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중국 업체를 통한 북한과의 우회 거래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함.
- 중국 단둥(丹東)의 한 대북 소식통은 RFA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에 이어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되면서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의 공장과 간접적인 위탁가공 거래를 해오던 한국의 봉제업자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있다"고 전함.

■ 대북제재 강화 후 밀수업자 더 활개...화학·철강 수요 늘어 (03.31 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한 이후에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위축된 틈을 타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는 밀수업자들이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함.
- CNN은 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 거점인 중국 단둥(丹東)을 찾아 대북 제재 강화 이후의 현지 분위기를 전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안에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CNN은 압록강대교 부근에서 소규모 세관들을 볼 수 있었으나 통행하는 트럭을 검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당국에 문의해도 화물 검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길 거부했다고 말함.
- CNN 기자가 접경 지역에서 은밀히 만난 중국 국적의 한 밀수업자는 거의 매일 북한으로 곡물이나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을 밀반출한다고 소개함. 그는 자신에게는 제재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밀수업자들은 제재 강화를 사업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말함. 그는 "합법적인 화물 운송이 줄면서 북한 사람들이 밀수업자들로부터 더 많은 물품을 사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제재 이후 산업용 화학물질이나 철강의 수요가 늘었다고 전함.

■ 유엔 제재로 北 수출 반토막 날 것...외환보유고도 고갈 (04.01 연합뉴스)

- 북한 핵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반토막 나고 외환보유고 역시 고갈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 중국 환구망(環球網)은 1일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를 인용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최근 수출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전함.
- 환구망은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산 광물자원이 수출금지 품목으로 명시됐고 북한에 대한 항공유 제공도 제재조치에 포함됐다"며 "안보리 제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외환보유고 고갈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접경 中상인들 "한반도위기 결국 사라질 것"...투자준비 (04.02 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위기국면에도 불구하고 북중접경을 무대로 활동하는 중국 상인들은 현재의 위기가 결국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최근 북중접경인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를 방문해 현지 동향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라며 상인들

- 이 대북제재 이후를 고려해 투자를 늘릴 태세라고 2일 보도함.
-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시 아오인(傲麟)물류회사의 관웨이광(范維光·45) 사장은 북핵 위기에도 오히려 훈춘시에 현대적 설비를 갖춘 대형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판 사장은 "훈춘은 반경 200km 내에 자르비노·나진 항 등 러시아·조선의 항구 10곳이 분포해 물류허브가 될 것이며 투자할 가치가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 마지막엔 위험이 없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 북중무역에 10년째 종사한 주권(朱軍)씨는 "요사이 조선으로 가는 중국인 상인·관광객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이곳의 민간무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에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전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北, 남측과 통화하는 주민 잡기 위한 매복작전 강화 (03.29 연합뉴스)

- 북한이 5월 초로 예정된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공안당국을 앞세워 한국과 통화하는 주민을 체포하기 위한 매복 작전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북중 접경지역의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해 대내 통제와 대외 위협 수위를 모두 높이는 모양새임.
- 대북 소식통은 29일 "현재 함경북도 무산지역에서 한국과 통화하는 주민을 체포하기 위해 공안당국이 특수작전에 돌입했고, 특히 한국과 통화가 잘되는 무산 인근 '림강' 지구에서 매복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림강 지구에 고정 설치된 전파방해기의 가동을 하루 2~3시간씩 중단해 통화가 잘되도록 한 뒤 주민들을 유인해 체포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70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 공안당국의 유인 매복에 걸려 체포된 주민이 10여명에 달한다"면서 "체포된 주민들은 70일 전투가 끝나고 당 대회 전후 (간첩죄를 적용해) 시범적으로 총살한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함.

■ 북한TV, 연일 '전쟁영화'로 대남·대미 적개심 고취 (03.29 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28일 오후 9시께 '조선예술영화 - 5시부터 5시까지'를 방송하였으며,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가 1980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약 78분 길이의 이 영화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포병연합부대의 활약을 다룬 것임.

- 북한은 24~27일에도 '종군기자의 수기', '사랑과 위훈', '새별', '북두칠성' 등의 전쟁 영화를 내보냈다.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임. 매일 1~2편의 '예술영화'나 '기록영화'를 내보내는 북한TV가 이처럼 연일 전쟁 영화로 방송 목록을 채우는 것은 이례적임.
-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사상 최대 규모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주민들의 대남·대미 적개심을 고취시켜 오는 5월의 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됨.

■ 북한, 페이스북·트위터·한국사이트 공식 차단 (04.01 연합뉴스)

- 북한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한국의 미디어 웹사이트를 공식 차단했다고 AP 통신이 평양발로 1일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금주 들어 북한 체신성은 이동통신사 고려링크 등을 통해 차단 사실을 공지함.
- 체신성은 공지문에서 "반(反)공화국의 가짜 선전 웹사이트, 성(性)과 성인용 웹사이트가 차단된다"며 페이스북과 한국 사이트, 미국의소리(VOA) 웹사이트 등을 그 대상으로 언급함.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여러 달 동안 비공식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고 AP는 전함.
- 북한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은 정부가 승인한 인트라넷 접속만 허용돼 실질적으로 거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임.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北 피의자 구속기간 무려 5개월25일...검사 권한 막강 (03.28 연합뉴스)

- 북한이 피의자 구속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늘린 5개월 25일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체제보장과 권력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됨.

- 북한 검찰의 권한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됨. 북한의 형소법은 검사가 예심을 맡은 예심원에 구속 처분 결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 전에는 검찰이 구속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지시만 할 수 있음.

■ **북한 '산림자원 관리 정보체계' 개발 주장 (03.28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전국적 차원의 산림자원 관리 정보체계(시스템)를 개발했다고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28일 보도.
- 조선의 오늘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산림과학원, 중앙산림설계기술연구소, 중앙식물원연구소가 2년간 연구해 완성한 이 시스템은 위성자료해석기술, 지리정보체계기술 등으로 이뤄졌다면서 "산림 조성과 보호, 관리를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힘.
- "(이 체계로) 각종 주제지도 작성과 3차원 산림지형 묘사 등 직관적 묘사를 할 수 있어 산림건설 설계와 총계획 작성, 전면 조사와 국소지역 조사, 산불 진화 등을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임.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 **미국 국무부, 북한에게 '도발적 언행 삼가라' 거듭 촉구 (03.2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 매체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도발적 언행을 삼가라"고 거듭 촉구함.
- 가브리엘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이 역내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언행을 삼가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리수용 북 외무상, 미국에 선제 핵공격 가할 준비돼 (03.28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행동에 대응해 사전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28일(현지시간) 주장함.
- 리 외무상은 이날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광적 히스테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군의 대응 체제를 선제공격 체제로 이행했으며 선제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음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말함.
- 리 외무상은 "현재 한반도에는 당장에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습공격을 전제로 실전 훈련을 벌이고 '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 때문"이라고 비난함.

■ **北, 핵안보정상회의 맹비난…“美부터 핵폐기 선언해야” (03.30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31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음.
- 북한의 민간단체 아리랑협회가 운영하는 매체인 '메아리'는 30일 '핵안전수뇌자 회의(핵안보정상회의)에 보내는 충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핵안전을 론의(논의)하려면 미국의 핵무기 특히 남조선에서 벌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부터 문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핵위협과 불안을 초래하는 장본인이며 주범"이라며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 것은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념원(염원)하는 내외 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라고 주장함.

■ **미국 상장기업 25개사 북한산 금 거래 연루 (03.30 연합뉴스)**

- 미국 증시 상장업체 25개사가 북한으로부터 금(金)을 조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共同)통신이 30일 워싱턴발로 보도함. 이들 기업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조치에 따라 거래의 벌금을 물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미국 기업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제품이나 원료를 수입하는 건 그동안에도 불법이 었음. 현재는 준법 컨설턴트로 일하는 피터 하렐 전 국무부 대테러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새로 발동된 제재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관련 법을 더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함.

■ **美 전문가, “북한, 신형 고체추진 2단 미사일 개발 가능성” (03.30 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 미사일과 비슷한 크기의 신형 2단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발표한 고체연료 추진 로켓의 지상 연소시험 성공 주장은 이런 시도의 첫 단계라는 분석이 제기됨.
-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서 공개한 고체연료로켓 연소시험 사진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내다봄.
- 북한이 실제로 고체연료 추진 로켓을 무기화한다면 "노동 미사일을 대체할 만한 2단 미사일"이 될 수 있으며 "한때 노동 미사일의 주 고객이었던 파키스탄과

이란이 2단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을 개발한 점"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고 실링 연구원은 주장함.

■ **갈루치, “북한 핵확산 시도, 미국에 특히 위협” (03.30 연합뉴스)**

- 북한이 야기하는 핵문제 중에서도 핵무기나 핵물질을 확산하려는 시도가 미국에 고유한 위협이 된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지적함.
- 갈루치 전 특사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주최 핵안보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핵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핵기술이나 핵물질을 이전하려 시도하는 일이 미국에 특히 위협적이라는 점을 (북한이)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함.
- 북한발 핵확산 우려가 "핵 테러 문제라는 가장 우려되는 사안과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한 갈루치 전 특사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물질이나 핵무기 기술의 이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북한을 운영하는 그 젊은이(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가 핵 역지에 대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도 북핵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함.

■ **北외무성, 미국이 자주권 침해하면 핵무력으로 징벌 위협 (03.31 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며 자주권을 침해하면 핵무력을 동원해 징벌하겠다고 위협함.
-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의 최고 이익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 드는 경우 즉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힘. 대변인은 또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합동군사연습, 제재압살책동이야말로 조선반도 정세가 핵과 핵이 맞부딪칠수 있는 일촉즉발의 극단한 지경에 치달아오르게 한 근원"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의 독자 제재를 겨냥해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 제재는 침략행위로서 국제법에 전면배치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들이 우리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망동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신성한 최고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맞받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힘.

■ **美재무, 국제사회 공조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北변화 유도 (03.31 연합뉴스)**

-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함.
- 루 장관은 먼저 미 정부가 그동안 취한 대(對)이란 및 러시아 제재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같은 위협에 대처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배운 교훈을 잘 적용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없다"고 역설함.

-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 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함.

나. 북·중 관계

■ 중국, 북중 접경지역 밀무역 대대적 단속 나서 (03.27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해관(세관)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밀무역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중국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국 해관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압록강 일대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등강(東港)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밀수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다수의 밀수꾼을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함.
-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최근의 밀무역 단속 강화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함.

■ 중국서 새 100위안권 위폐 발견...中언론 “북한산 위폐 대량유통” (03.28 연합뉴스)

- 중국에서 2015년판 100위안(1만 7천954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중국언론들이 28일 보도함.
- 현지 언론들은 북중접경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위폐가 북한에서 제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함.

■ 中, 北외무상 '선제 핵공격' 주장에 “자극적 언행 말아야” (03.29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 행동에 대응해 선제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냄.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당사국이 현 정세 아래에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과 언사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北관영매체에 中 우회 비난글...“천선관계 서슴없이 저버려” (04.01 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함.

- 1일 조선중앙통신에는 '불공정한 세계정치 질서를 변혁하기 위한 정의의 불길을 지펴 올리자'라는 제목으로 북한 조선국제정치문제연구소 논평원의 기고문이 실명 없이 실림.
- 기고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겨냥해 "최근 일부 대국들마저 미국의 비열한 강박과 요구에 굴종하고 지어 서푼짜리 친미 창녀의 구린내 나는 치맛바람에 맞장단(맞장구)을 쳐주는 상상 밖의 치사한 사태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기고문은 이어 "피로써 이루어놓은 공동의 전취물(전리품)인 귀중한 우의(친선)관계도 서슴없이 췌버리고(저버리고) 이 나라, 저 나라와 밀실 야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 정의와 진리를 짓눌러보려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세계정치의 허상과 진실을 다시금 꿰뚫어보게 된다"며 혈맹으로 통하는 중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에둘러 나타나기도 함.

다. 북·일 관계

- **조선총련 산하 가극단, 내달 북한서 김일성 생일 기념 공연 (03.29 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의 금강산가극단이 다음 달 북한에서 열리는 예술축전에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조선총련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금강산가극단은 김일성(金日成·1912~1994) 주석의 생일을 기념해 다음 달 중순 평양에서 열리는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공연할 계획임.
 - 일부 단원이 이미 북한으로 건너갔으며 나머지 단원이 순차적으로 북한으로 이동해 다음 달 중순 행사 때 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산케이는 전함.
- **日외무상, “北도발 받아들일 수 없다” 미사일 발사 비판 (04.01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1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함.
 -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에 관해 "이런 도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나 한국 등 관련 국가와 연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뜻을 기자들에게 표명함.
 -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이 쏜 미사일에 관해서는 "정보 수집,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인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 北 “유엔, 한미훈련 관련 긴급회의 요구 외면” 주장 (04.02 연합뉴스)

- 북한은 2일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를 외면했다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침략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것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구했다"고 밝힘.
- 대변인은 "하지만 안보리가 제소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사명도, 국제기구로서의 활동에서 생명이 되는 공정성도 쫓겨나고(내버리고) 미국의 충실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비난함.
- 북한의 이런 주장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실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부각하고 후속 도발의 명분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 北, 원산서 북중 접경 부근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 발사 (03.29 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중국과 가까운 내륙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하며 또다시 무력시위를 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 4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내륙 지역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이 발사체는 정북쪽에 가까운 1시 방향으로 약 200km를 비행해 양강도 김형권군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이 바다가 아닌 중국과 가까운 내륙을 향해 발사체를 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북한이 쏜 발사체가 내륙에 떨어진 것은 북한이 발사체의 명중도 시험을 목적으로 설치한 표적을 향해 발사했기 때문으로 보임. 군 당국은 발사체의 기종을 분석 중이지만 비행거리로 미뤄 300mm 신형 방사포인 것으로 추정함.

■ 北, DMZ에 경계초소 200여개 추가·공세적 작전하나 (03.31 연합뉴스)

- 북한군이 우리 군과 대치 중인 비무장지대(DMZ)에 경계초소를 대거 늘린 것으로 알려짐. 군 관계자는 31일 "북한군이 작년 말부터 DMZ에 경계초소 건설작업을 활발히 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힘. 북한군이 DMZ에 새로 설치한 경계초소는

전 전선에 걸쳐 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새로 설치한 경계초소는 전방보다는 후방 감시가 주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북한군의 귀순을 막기 위한 '내부 감시용'일 수 있다는 것임.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DMZ에 경계초소를 늘린 것은 다양한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北 내륙으로 쏜 방사포, 표적 빚나갔을 가능성 (03.3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지난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내륙지역인 양강도 김형권군을 향해 발사한 단거리 방사포 1발이 설정한 목표를 빚나가 실패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방사포 발사시험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 주일 전부터 계속되었다"면서 "29일 발사한 신형 방사포 실험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
- 양강도 소식통은 RFA에 "이번 방사포 발사시험의 표적은 양강도 김형권군 중부에 위치한 '황수원 저수지' 입구 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방사포탄이 '황수원 저수지'에 위치한 표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면 사격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위해 저수지 인근에 있는 황수원 비행장에 여러 감시설비들이 설치됐고 사격 전 미사일 유도송신기가 들어 있는 부표가 저수지에 띄워지기도 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김정은(제1위원장)이 워낙 비밀유지를 강조하다 보니 황수원 저수지에 세운 표적 말고도 다른 곳에 표적을 더 만들어 주민들을 현혹했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함.

■ 北, DMZ에 경계초소 200여개 추가...공세적 작전하나 (03.31 연합뉴스)

- 북한군이 우리 군과 대치 중인 비무장지대(DMZ)에 경계초소를 대거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31일 "북한군이 작년 말부터 DMZ에 경계초소 건설작업을 활발히 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힘. 북한군이 DMZ에 새로 설치한 경계초소는 전 전선에 걸쳐 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군이 DMZ에 경계초소를 대폭 늘린 것은 우리 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DMZ 작전을 보다 공세적으로 할 것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북한군은 2014년부터 DMZ에서 정찰, 매복, 지뢰 설치 등 활동을 눈에 띄게 강화한 것으로 파악됨. DMZ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우리 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임.
- 반면 새로 설치한 경계초소는 전방보다는 후방 감시가 주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북한군의 귀순을 막기 위한 '내부 감시용'일 수 있다는 것임.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에 따라 북한군이 내부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임.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DMZ에 경계초소를 늘린 것은 다양한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北, 동해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1발 발사...핵안보정상회의 거냥 (04.01 연합뉴스)**

- 북한이 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며 또다시 무력시위를 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낮 12시 45분께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북한은 SA계열 및 KN-06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 당국은 이번에 쏜 기종과 비행 거리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이 미사일은 100여km 안팎으로 비행해, 처음엔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으나 레이더상에 나타난 궤적을 분석한 결과 지대공 미사일로 최종 분석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데 맞춰 미사일을 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공조에 대해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해석됨.

■ **北 GPS 교란전파 과거보다 반경 확장...교란장비 10여종 보유 (04.01 연합뉴스)**

- 북한이 한 달 전부터 우리나라를 향해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전파를 발사한 것은 대남 긴장 조성과 함께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한미 독수리훈련을 겨냥하는 등 다목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음.
- 국방부는 1일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부터 군사분계선(MDL) 북방 여러 곳에서 GPS 전파 교란 행위를 감행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힘. 북한은 한 달 전부터 GPS 교란 전파를 시험 발사하다가 지난달 31일에는 출력을 최대로 높여 실제 교란 행위를 감행했다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설명임.
- 문상군 대변인은 "(피해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현재 군 대책반에서 조치하고 있다"면서 "(교란 전파로) 항공기가 충돌해 인적·물적 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한국 겨냥 핵탄두 소형화 기간 단축 가능 (04.01 연합뉴스)**

- 최근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빠르게 한국을 위협할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북한연구학회 주최로 서울 북한대학원대에서 열린 춘계학술회의에서 "미사일을 처음부터 갖고 여기에 맞는 핵탄두

를 개발하는 경우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아울러 채연석 전 항공우주연구원장은 발표에서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광명성호와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2호를 비교해보니 두 발사체가 같은 크기에 동일한 성능으로 확인됐다"며 "로켓 연소시간도 120초로 같았다"고 주장함.

■ **북핵무기 김정은이 직접 통제...안정성 낙관은 일러 (04.01 연합뉴스)**

- 북한 핵무기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정규군과 별도 체계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옴.
- 김보미 통일연구원 프로젝트연구위원은 1일 북한연구학회 주최로 서울 북한대학원대에서 열린 춘계학술회의에서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전력과 관련된 결정 사항들은 최고사령관 김정은에게 모두 일임되는 통제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김 연구위원은 "핵전력은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핵무기 탈취 가능성을 예방하고 전력의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군의 지휘 체계와 분리해 평시에도 최고사령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사 준전시상태...핵 계속 추진 (04.01 연합뉴스)**

- 서세평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1일(현지시간) 한반도는 지금 준전시상태이며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서 대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 최고 지도자를 해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그는 또 "미국이 계속 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설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핵 저지력 등 더 많은 저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서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의 제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이에 반대한다"면서 "현재 한반도가 준전시 상태여서 우리는 바쁘다"고 말함.

■ **北, 신형 지대공유도무기 시험발사...공중목표 정확타격 (04.02 연합뉴스)**

- 북한은 2일 신형 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발사를 했다고 밝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형(신형)의 반항공(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 판정을 위한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면서 "반항공요격로켓(로켓)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멸적의 비행운을 새기며 적 공중목표를 정확히 타격 소멸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관정을 통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 제작한 새형의 반항공 요격 유도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이 최신 군사과학 기술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다는 것이 검증 확인됐다"고 주장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3.28		美상원 재무위원장, '한국, 한미FTA 이행 미흡...TPP와 연계(연합뉴스)
	3.29	국립외교원장, 한미, 핵 선제사용 독트린 검토 필요(연합뉴스)	
		한·일, 트럼프 '핵무장 허용' 발언에 어리둥절(워싱턴포스트)	美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한국 방위공약 변함없다(연합뉴스)
		백악관, 한·미일 정상회의 북한 위협 공동 대응 논의(연합뉴스)	
	3.31		美 ISIS소장, 북한은 핵개발 자체를 억지력으로 활용 시도(연합뉴스)
4.1	朴대통령, 한미일 대북압박 연대강화...北도발시 더 강력제재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3.31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NLL 인근에 인공어초 설치(연합뉴스)	
	4.1	한중 정상, 안보리결의 전면적 이행...시진핑, 대화도 강조(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4.1	日 "한일군사정보협정 조기체결 진행"...靑 "환경조성 먼저"(연합뉴스)	
	4.2	日언론 "한일정상, 역사논의 자체...위안부 해결은 진전없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3.30	美 北 핵·미사일 추구하는한 중국 싫어해도 사드배치 협의(연합뉴스) 미국무차관 中의 대북제재 협력에 고무·긴밀 협력(연합뉴스)	
	3.31		中 사드 배치 반대는 美 미사일방어망에 의한 포위 우려 때문(연합뉴스)
	4.1	美中 “대북제재 완전이행”...시진핑, 오바마 면전서 사드 반대(연합뉴스)	中 정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문제는 주권 사안(연합뉴스)
	4.2	美해군, 이달초 남중국해서 또 ‘항행의 자유’ 계획(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3.28		日관방, 비핵화 원칙 변함없다·‘트럼프’ 핵보유론 경계(연합뉴스)
	3.29		아베, 안보관련법으로 미일동맹 유대 강화됐다(연합뉴스)
	3.30		日보수야당 대표, 트럼프에 맞장구·핵보유 논의해야(연합뉴스)
	4.1	오바마, 아베에 ‘주일미군기지 이전 지연’ 우려 표시(연합뉴스)	日, 핵보유 헌법상 금지된건 아냐·트럼프 ‘핵보유론’엔 반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3.29		러 보고서 미국은 중국 견제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것(연합뉴스)
	3.30		러,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불참·“회의 의제 소진돼”(연합뉴스) 미러, 시리아 내 IS 수도 락카 탈환작전 조율중(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3.28		일본, 남·동중국해 연결목에 레이더 배치·‘턱밑에서’ 中견제(연합뉴스)
	3.29	中언론, 日 새 안보법은 ‘전쟁법’·판도라	

		상자 열었다(연합뉴스)	
	3.30	시진핑, 아베의 정상회담 요청 퇴짜·아베 즉석 대화 모색(연합뉴스)	
	3.31	중국, 남중국해 실효지배 강화 조치 계 속할 것(연합뉴스)	日외무상, 中에 견제구·핵보유국에 핵 탄두수 공개 요구하겠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 **美상원 재무위원장, '한국, 한미FTA 이행 미흡'...TPP와 연계 (03.28 연합뉴스)**

- 오린 해치(공화·유타)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연계시킬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남.
-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치 위원장은 지난 2일 안호영 주미 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합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약값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 5개 항목은 이행이 미흡하다고 주장함.
- 한 소식통은 "해치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 중 약값 관련은 치료재료 상한가율 조정을 통해 일부 해결된 사안이고,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역시 지난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면서 해치 위원장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관련 국가들에 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압박함과 동시에 TPP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미 행정부에 제대로 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국립외교원장, 한미, 핵 선제사용 독트린 검토 필요 (03.29 연합뉴스)**

-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은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인정하기는 싫지만, 탄두(대기권) 재진입 문제로 시간이 필요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와 지역을 겨냥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으로 무장한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가 실전에 배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윤 원장은 또 북핵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냉전 시기의 핵 독트린 매뉴얼을 검토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맞서 선제사용(first use),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등 신뢰할 수 있는 최선의 핵 독트린을 한미 양국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대북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 이어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을 감안, 미국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의 신뢰성을 갖는 확장억제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핵 독트린 검토를 제기함.

■ **한·일, 트럼프 '핵무장 허용' 발언에 어리둥절 (03.29 워싱턴포스트)**

-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한·일 독자 핵무장 허용' 시사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발언이 보도된 후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 관계자가 모두 동맹 관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주요 일간지 사설들도 고개를 내저었다"며 일부 국내 신문의 사설을 소개함.
- 앞서 트럼프는 25일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교정책 구상을 소개하며 한·일 핵무장 허용에 대한 질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독자 핵무장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함. 또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기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답함.

■ **백악관, 한·미·일 정상회의 북한 위협 공동대응 논의 (03.29 연합뉴스)**

-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미국 정부도 28일 공식으로 발표.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3국 정상이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과 전 세계 차원에서 3자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美 ISIS소장, 북한은 핵개발 자체를 억지력으로 활용 시도 (03.29 연합뉴스)**

-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체계 수립보다는 핵무기 개발 그 자체를 일종의 억지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고, 북한의 과장된 위협적 수사들도 이를 감안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조언함.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28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전 세계 핵물질 현황을 발표하며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은 물론, 우리(미국)가 그들의 핵무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싶어한다"고 주장함.
- 그는 "북한 군부의 핵무기 개발 시도가 실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그런 시도들이 핵실험 같은 행동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에서 하는 말들에 과장이 있음을 이해해야 하지만, 북한이 하는 발언들 자체는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美,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한국 방위공약 변함없다' (03.2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힘.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당선 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함.

- **백악관, 트럼프 '韓日 핵무장용인'에 "美정책과 직접 배치" (03.31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자 백악관이 이를 작심하고 비판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를 얻는다는 전망은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주장을 강도 높게 반박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국제사회로부터 폭넓고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정책과 직접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미국)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밝힘.

- **백악관, 트럼프 '韓日 핵무장용인'에 "美정책과 직접 배치" (04.0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31일(미국 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뿐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컨벤션 센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한 뒤 대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함.
 - 박 대통령은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이어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과 관련해서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

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NLL 인근에 인공어초 설치 (03.31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바닷 속에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방지용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 이번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석재와 철재로 구성된 가로·세로 각 13.2m, 높이 8.2m, 무게 53.3t의 대형 인공어초임. 중국 어선이 주로 하는 저인망 어업에 쓰이는 그물이 쉽게 걸리도록 개량됐으며, 백령·대청·소청도 동측 해역에 총 8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 오는 7~8월에는 중국 어선 불법어업 빈도가 높은 연평도 해역에도 불법조업방지 시설물을 확대 설치함.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NLL 지역에 불법조업 방지 시설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어업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한중 정상, 안보리결의 전면적 이행…시진핑, 대화도 강조 (04.01 연합뉴스)

-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이 사상 최강으로 평가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함.
-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대북 압박 외교의 성과가 중국의 동참 수준에 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다만, 중국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핵 대화의 필요성도 같이 강조, 한반도 정세 운용 방향에서 한미일 3국과는 입장차를 보임.
-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6자회담의 틀에서 대화 재개 추진을 위한 건설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대화도 같이 강조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함. 이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병행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3국의 북한 선(先) 비핵화 입장과는 대비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 문제 공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다. 한·일 관계

■ 日 “한일군사정보협정 조기체결 진행”…靑 “환경조성 먼저” (04.01 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에서 31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가 논의됐으나 우리 정부는 "환경 조성이 먼저

"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GSOMIA 조기 체결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GSOMIA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을 추진하다 중단된 경위가 있다"면서 "GSOMIA 체결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함.
- 김 수석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힘.

■ **日언론 “한일정상, 역사논의 자제…위안부 해결은 진전없어” (04.02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양측이 역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한 대화를 자제했다고 평가함.
-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의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후 처음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에 관해 박 대통령의 "눈에 띄는 발언이 없었다"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함.
- 합의에 관해 한국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일본에 역사 문제와 관련해 계속 요구를 하면 합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통신은 배경을 분석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 **美, 北 핵·미사일 추구하는한 중국 싫어해도 사드배치 협의 (03.30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협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함. 미국은 특히 사드가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 방어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 정부에 사드의 기술적 성능과 제원을 설명하겠다고 제안함.
-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강연을 통해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한다면 우리 스스로와 동맹·우방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점점 더 긴박하고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 개시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함.

-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협의 개시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라고 재차 강조함.

■ 미국무차관, 中의 대북제재 협력에 고무·긴밀 협력 (03.30 연합뉴스)

- 로즈 고테필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제재 협력에 고무돼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고테필러 차관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 등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과 구축한 훌륭한 협력 관계를 언급하고 싶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전체가 단결해 전혀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가함.
- 이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금도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과 관련한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논의 상황에 대해 매우 고무됐다"고 덧붙임.

■ 中 사드 배치 반대는 美 미사일방어망에 의한 포위 우려 때문 (03.31 연합뉴스)

- 한국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한미중 3국 간에 핫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의해 포위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미 외교협회(CFR)의 박성태 연구원은 30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를 통해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력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핵전력이 미쳐 미국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포위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노력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지역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에 다른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함. 곧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한미일 3각 동맹을 결성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임.
- 결국, 미사일 방어망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저하해 분쟁 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을 용이하게 하는 등 전술적 방어 시스템이 전략적 공격 용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중국 측 우려임.

- **美中 “대북제재 완전이행”…시진핑, 오바마 면전에서 사드 반대 (04.0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데 동의함.
 - 그러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는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의 면전에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등 두 정상이 첨예하게 대립함. 양국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가파르게 대립함.
 - 회담에서 두 정상은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인 제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핵안보에 대한 양자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핵안보를 증진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켜나가기로 합의함. 두 정상은 또 양자 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해나간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함.
- **中 정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문제는 주권 사안 (04.01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자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하는 문제는 '주권 사안'이라며 스스로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힘.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 설치하는 중국의 주권 사안"이라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설치 여부는 공중(항공) 안전에 대한 위협 여부, 위협의 정도, 다른 측면의 요소에 달렸다"고 말함.
- **해군, 이달초 남중국해서 또 '항행의 자유' 계획 (04.02 연합뉴스)**
 - 미국 해군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세 번째로 '항행의 자유'에 나설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함.
 - 중국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진입할 군함 종류와 정확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음.
 - 소식통은 현재 남중국해에 파견돼 작전 중인 존 C. 스테니스와 같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더 작은 군함에 의해 수행될 것 같다고 전함.

나. 미·일 관계

■ **日관방, 비핵화 원칙 변함없다..트럼프 '핵보유론' 경계 (03.28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일 핵보유 가능론' 언급에 대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기자들이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은 정부의 중요한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견지해 나간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함.
- 미일안보체제를 중핵으로 하는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세계 번영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과 긴밀히 연대해갈 것"이라고 언급함.

■ **아베, 안보관련법으로 미일동맹 유대 강화됐다 (03.29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쉽게 하는 안보관련법 시행과 관련해 "미일 동맹의 유대가 강화됐다"고 말함.
- 그는 이날 국회 참의원 예산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안보관련법 시행으로) 만일의 사태에 (미일 양국이) 서로 돕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힘.
-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하는 일본의 안보관련법은 29일 0시를 기해 발효됨. 앞서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역대 내각이 헌법해석을 통해 금지했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함.

■ **日보수야당 대표, 트럼프에 맞장구..핵보유 논의해야 (03.30 연합뉴스)**

- 30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오사카유신회 대표(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오사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데 대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인지, 억지력으로(핵무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함.
- 마쓰이 대표는 이어 "트럼프는 일미동맹 관계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자국에서 모든 것을 조달하는 무력(정식 군대)을 가진다면 최종 병기가 필요하게 된다"며 "특히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또 일본의 핵보유에 대해 "피폭국민만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뜬 구름 잡는 소리하듯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임.

- **오바마, 아베에 '주일미군기지 이전 지연' 우려 표시 (04.0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전함.
 - 오키나와(沖縄)현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는 일본 정부와 지역 주민 간 찬반이 갈리며 법정 소송을 벌이다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협의를 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최근 양측이 수용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왜 화해에 응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전 대상 지역)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는가"라고 물어본 뒤 "(이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함. 이에 아베 총리는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의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며 이전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힘.

- **日, 핵보유 헌법상 금지된건 아냐...트럼프 '핵보유론'엔 반발 (04.01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헌법으로 금지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최근 미국 정계에서 제기되는 핵 보유 용인론에 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헌법상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1일 각의(내각회의)에서 결정함. 일본 정부는 핵무기 보유와 관련, 이론적으로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며 "핵무기라도 만약 그런 한도 내에 머무른다면 헌법이 반드시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서에서 밝힘.
 - 스가 관방장관은 "트럼프 씨가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나라가 모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결정한 것이므로 (트럼프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함.

다. 미·러 관계

- **러 보고서, 미국은 중국 견제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것 (03.29 연합뉴스)**
 - 미국이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함.
 -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와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모임인 '발다이 클럽'과 모스크바의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인 '대외정치 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할 공동 보고서 '2016년 러시아에 대한 위협'에서 이같이 주장함.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주요 전략적 위협은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그 주변을 친미 체제 국가들로 포위하려는 미국 정책"이라고 지적함.

■ **러,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불참…“회의 의제 소진돼” (03.30 연합뉴스)**

- 러시아가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끝내 불참하는 것으로 3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핵안보 강화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회의 의제가 소진됐다"며 러시아 측의 불참 의사를 밝힘.
- 자하로바는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주최측(미국)은 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등에 자신들의 '지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며 "이같은 외부 개입의 선례를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함.
-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러시아의 정상회의 거부는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함. 로즈 부보좌관은 2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핵안보분야 협력을 통해 이익을 봐 왔다"면서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무엇보다 러시아가 스스로 이익을 잃는 것"이라고 언급함. 로즈는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미국은 핵안보 문제와 관련한 협력과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임.

■ **마러, 시리아 내 IS 수도 락카 탈환작전 조율중 (03.30 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중북부 도시 락카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외무부 고위 관계자가 30일(현지시간) 전함.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올렉 시로몰로토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러시아와 미국이 시리아 내 IS 본거지인 락카를 탈환하기 위한 구체적 군사작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라. 중·일 관계

■ **일본, 남·동중국해 연결목에 레이더 배치…턱밑에서 中견제 (03.28 연합뉴스)**

- 일본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잇는 길목에 레이더 부대를 배치. 이 부대는 중국의 움직임을 턱밑에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중국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교도통신과 마이니치(毎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8일 일본 영토 가운데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인 오키나와(沖縄)현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에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설치하고 이곳에 연안 감시 부대를 배치함.

- 일본 정부는 또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이시가키지마(石垣島),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도 육상 자위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中언론, 日 새 안보법은 '전쟁법'...판도라 상자 열었다 (03.29 연합뉴스)**

-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29일 발효된 일본의 신안보법을 '전쟁법안'이라고 지칭하며 일본의 군사 재무장 행보를 맹비난. 중국청년망(中國青年網)은 이날 "신안보법은 일본이 전후 계속 받아들여온 '전수방위'의 군사안보 기본정책을 포기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함.
- 중국정부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에 침략전쟁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군사·안보정책에서 "신중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며 신안보법에 우려를 나타냄.

■ **시진핑, 아베의 정상회담 요청 퇴짜...아베 즉석 대화 모색 (03.30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요청을 일단 거부한 것으로 보임. 일본 정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31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맞춰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타진했으나 중국이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초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뜻을 전했으나 중국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 일본 정부는 중국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함.
- 4월 1일, 중일 양자대화 불발.

■ **日외무상, 中에 견제구...핵보유국에 핵탄두수 공개 요구하겠다 (03.31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4월 10~11일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핵보유국에 핵탄두 수 공표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힘.
- 31일자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기시다 외무상은 전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탄두 수가 분명하지 않으면 감축 협상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키우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함.
- 기시다의 이 같은 발언은 정확한 핵탄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넛케이는 분석함. 아울러 기시다 외무상은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약해진 중일 고위급 대화 동력을 살리는데도 부심하고 있음.

■ **중국, 남중국해 실효지배 강화 조치 계속할 것 (03.31 연합뉴스)**

- 중국은 앞으로도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조성과 무기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중국 군 소장 출신인 첸리화(錢利華)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 중국측 위원회 부회장이 밝힘. 첸 부회장은 31일 자 일본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움직임에 대한 각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공섬 조성이나 무기배치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계속할 것임을 내비침.
- 첸 부회장은 미군이 인공섬 주변에 선박을 파견하는 '항행자유' 작전에 대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가 항행자유작전에 참가하면 "중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군의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절박한 군사적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의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대내외 동향		유엔 인권이사회, “김정은, 이제라도 인권유린 만행 멈추고 인민 편에 서야”(데일리NK)
	3.29	몰타 정부, 자국 내 북한 근로자 노동착취 조사 중(미국의 소리)
		北, 黨대회 앞두고 주민통제 강화...“사상동향 재조사”(데일리NK)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탈북자 사연 동영상 공개(미국의 소리)
	3.30	캐나다 의회서 북핵 인권 세미나 가져(자유아시아방송)
	3.31	北 해외근로자, 하루 17시간 중노동에 월급 50달러(연합뉴스)
	4.1	韓美日, 北비핵화·인권개선 위한 대북압박 강화(연합뉴스)
북한인권	3.28	北변화에 간부층 활용가능...인권 문제엔 양보 없어야(데일리NK)
	3.29	“인권이란 게 뭐냐” 개념조차 잘 모르는 北주민들(데일리NK) 탈북 여성, 中서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해야” 공개 비판(AP통신)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대북지원	4.2	북한, 이산가족 등 인도적 교류 중단 선언...통일부 “강력규탄”(미국의 소리)
북한동향	3.31	프랑스 NGO, 北 염소농장에 축산기술 전수(자유아시아방송)

■ 주간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유엔 인권이사회, “김정은, 이제라도 인권유린 만행 멈추고 인민 편에 서야” (03.29 데일리NK)**
 -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3일,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국제 법정에서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함.
 - 인권유린이 북한 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만큼 국제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면 아무래도 국제법 등을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유엔인권결의안을 이번에는 특별히 채택함.
 - 이번 결의안에 대해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됨.

- **몰타 정부, 자국 내 북한 근로자 노동착취 조사 중 (03.29 미국의 소리)**
 - 몰타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힘 앞서 유럽 매체들은 몰타의 의류공장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해 유럽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함.
 - 몰타 사회부 (Ministry for Social Dialogue)의 류번 시버레스 소비자.시민자유국 공보담당관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 시버레스 담당관은 몰타 산업관계부가 현재 북한 노동자 착취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초기 조사 결과 노동착취 등 부정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함. 그러나 시버레스 담당관은 추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힘.

- **北, 黨대회 앞두고 주민통제 강화…“사상동향 재조사” (03.29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7차 당(黨)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가족관계 및 사상동향을 면밀하게 재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평안남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신분 재정립을 위한 전국적인 조사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각 도당 조직부와 근로단체 일꾼들을 책임자로 하는 도 보위부, 인민보안국 합동조사 구루빠(소조)가 조직·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함.

- 소식통은 “(당국은) 탈북자, 출소자, 비(불)법행위로 해당기관의 제재를 받은 인물과 관련가족들을 먼저 조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 입국이 확인된 탈북가족은 엄격한 적대 계층으로 구분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방송을 통해) 현 (북한) 체제를 비난한 것이 확인되면 가차 없이 정치범 가족으로 내몬다”고 설명함. 아울러 소식통은 “4촌까지의 직계 중에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간부직에서 해임된다”면서 “당 및 법(보안, 보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8촌이 적대계층에 포함되면 현직에서 해임·철직되는 것은 물론 노동현장으로 쫓겨나야 한다”고 소개함.
- 소식통은 “적대, 동요계층으로 분류된 가족들은 벌써부터 사회생활의 여러 면에서 제한받거나 감시통제 받는다”면서 “이들에 대해 여행증을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발급해주더라도 현지 보안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감시대상 관련 암호를 (여행증에) 기입해 놓기도 한다”고 전함. 이어 “일부 탈북자 가족들은 ‘한국에서 제발 조용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연좌제로 인한 당국의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탈북자 사연 동영상 공개 (03.29 미국의 소리)**

- 유엔이 이례적으로 탈북자의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함.
-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긴 투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작 공개한 동영상으로 최근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주찬양 씨의 사연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캐나다 의회서 북핵 인권 세미나 가져 (03.30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인권단체 북한인권협의회가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북한해방과 북핵 무용화 전략’주제의 대규모 토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이 단체 이경복 회장이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힘.
- 이 회장은 또 이번 토론회는 캐나다 상 하원 의원이 함께 주재하며 다양한 계층의 연사가 참석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핵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캐나다 의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적극 나설 것도 촉구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함.

■ **北 해외근로자, 하루 17시간 중노동에 월급 50달러 (03.31 연합뉴스)**

-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하루 17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데도 월급은 고작 50~100달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옴. 현지에 이탈 근로자를 위한 불법 구금시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

한 만큼 국제인권단체들과 현지 인권단체 간의 공조가 절실함.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7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힘. 윤 소장은 "이들의 휴일은 월 1회이지만 이마저도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노동자는 쉬는 날 없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국가명절이 올 때까지 내내 일해야 했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임. 또 "(북한 근로자들의) 거주 시설도 열악하다"며 "가장 열악한 거주지는 러시아 벌목공의 숙소인데, 작업장 인근의 냉난방도 안 되는 숙소에서 8~10명이 함께 거주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해야 했다"고 말함.
- 이런 중노동과 악조건을 견디는 끝에 이들이 손에 쥐게 되는 월수입은 50~100달러에 불과함. 원래 받는 돈은 약 500달러이지만, 북한 당국이 이 가운데 70%를 챙기고 숙박료와 식비 명목으로 10~20%를 추가로 떼어가기 때문임. 윤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 중동, 몽골 등 40여 개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약 5만~6만명, 최대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북한 당국은 이들을 통해 최소 연간 2억~3억 달러(한화 약 2천300억~3천440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韓美日, 北비핵화 인권개선 위한 대북압박 강화 (04.01 연합뉴스)

- 3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박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보다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함.
- 오바마 대통령도 "3자 협력을 통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기회와 번영을 줄 수 있다"고 피력함.

2. 북한인권

■ 北변화에 간부층 활용가능...인권 문제엔 양보 없어야 (03.28 데일리NK)

- 시나 폴슨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장은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향후

- 북한 고위급 간부들과 다시금 접촉해 관계를 이어갈 기회가 생기더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일말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폴슨 소장은 이어 “(우리는)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한 북한 당국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다시는 북한 내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북한 정권 내 인사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더 높여 지적해야 하는 부분도 이것이다”면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는 피해 당사자들에게만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봤을 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함.

■ **“인권이란 게 뭐냐” 개념조차 잘 모르는 北주민들 (03.29 데일리NK)**

- 인권이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북한 주민은 드물 것으로 평가됨. 김일성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독재정권을 수립하면서 이를 ‘진정한 인민의 정부’라고 선전함. 하지만 주민들에게 인권이란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70여 년간 이상화 교육에만 치중함.
- 대다수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야 인권의 개념을 알게 됐다고 말함. 이처럼 세상과 동떨어진 곳, 폐쇄된 사회에서 살다보니, 자신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인권’이 많이 회자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짐. 하지만 보안원들이 시장활동을 억압할 땐 ‘왜 내 인권을 억압하냐’라면서 부당함을 토로 하는 경향은 보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인권 유린에 대한 개선 언급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음.

■ **탈북 여성, 中서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해야” 공개 비판 (03.29 AP통신)**

- 여성 탈북 작가 이현서 씨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공개적으로 비판함.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6일(현지시간) 저서 ‘일곱 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 어느 탈북민의 이야기 (The Girl with Seven Names : A North Korean Defector’s Story)’의 출판 홍보차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붙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중국을 거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 씨는 이어 “중국은 우리(탈북민)가 거쳐야 할 나라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서 (송환되면서) 탈북 성공 확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그는 “내가 중국 정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자 했다”고 공개 비판 취지를 설명했

다고 통신은 전함.

3. 탈북자

- 특이사항 없음.

4. 이산가족·납북

- **북한, 이산가족 등 인도적 교류 중단 선언...통일부 “강력규탄”** (04.02 미국의 소리)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류를 중단한다고 선언함.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북남 사이의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힘.
 - 이 같은 북한 측의 남북교류 중단 선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인도적 사안이며, 인류에 관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외면하고 정치적 대결의 소재로 이용하려 할 뿐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왜곡, 폄훼하고 우리 국가원수까지 저급하게 비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함.

5. 대북지원

- **프랑스 NGO, 北 염소농장에 축산기술 전수** (03.31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행되는 국면에서 프랑스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염소 농장에 축산업 기술을 전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프랑스의 국제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는 30일 RFA에 "올해 유럽연합(EU)에서 미화 132만 달러(한화 15억1천여만 원)를 지원받아 북한 식량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사업은 황해남도 염소농장 4곳에 대한 염소 사육 및 두유 제조기술 전수와 두유 제조기 지원,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제품 지원 등으로 구성됨. 이 단체는 "황해남도 농장 일꾼이나 농업대학 축산학과 교수와 학생 등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임.

6. 북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